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01.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듭니다	05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	06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08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09
유자격자 명부 등급기준 재편성	10
공동이행방식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	11
협상계약 시 납품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	1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13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 승인요건 명확화	14
02. 공공판로지원을 확대합니다	1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	16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	1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	18
공기업 등의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	19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 확대	20
지방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외 공동도급제 적용 연장	21
공사규모에 따른 구성원 수 및 지분율의 탄력 운영	22
03. 창조경제와 함께 합니다	23
용역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24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방식 개선	25
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 재개발 범위 명확화	26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자의 작업 장소 선택권 확대	27
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28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	29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기술력 평가 도입	30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시기 조정	32
신성장산업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33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35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	36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금액 보장	37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 확대	38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사회적 책임 평가	39
나라장터 사용의 민간개방 확대	40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확대 및 산정근거 공개	41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2
입찰서류 허위·부정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43
공공조달 통계 작성범위 확대	44
05. 손톱 밑 가시를 뽑습니다	45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	46
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	47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	48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공사 확대	49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 사유시 공동수급체 재심사	50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합리화	51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정비	52
표준품셈 및 법정기준가격 준수	53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54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듭니다.

- *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
- *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 * 유자격자 명부 등급기준 재편성
- * 공동이행방식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
- * 협상계약 시 납품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을 변경 승인요건 명확화





창업초기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기준 완화

-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소기업 · 중기업 ·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초기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등에서 창업초기 기업의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적격심사, 우수조달물품 평가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 하였습니다.

* 조달청「다수공급자계약규정」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기준」 등

- 창업초기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 기업의 성공적 정착에 공헌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월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다수공급자계약규정,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기준 등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증 전	개 선
다수공급자계약 - 적격성평가 면제대상	〈신설〉	세부품명당 1회에 한해 창업 초기기업의 적격성 평가 면제
물품구매 적격심사 - 신인도 항목	〈신설〉	(10억원 이상제조) • 납품실적(5점) - 창업초기기업에 대해 기본가점 3점 • 생산기술숙련정도(4점) - 공장등록년수평가시 창업초기기업은 기본점수 1점 (고시금액미만 제조, 구매입찰) • 신용평가등급(30점) - 창업초기기업은 신용평가등급 만점 • 신인도(3점) - 창업초기기업은 가점 1점
우수조달물품 - 신인도 항목	신인도 심사항목	배점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2점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 (또는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3점
	신인도 심사항목	배점
	여성기업, 벤처기업, INNO- 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 Biz기업	2점
	여성기업으로서 벤처기업(또는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창업 초기기업 ,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 Green-Biz기업)	3점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최근 3년 · 5년간 공사실적에서 5년 · 10년으로 연장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

- 기준완화를 통해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으로 인한 시공경험 평가에서 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적격심사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시공경험 평가기준 인정기간	최근 3년 또는 5년	최근 5년 또는 10년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

- 물품구매 적격심사의 항목 중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 조달청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제2항

- 실적이 많지 않고 기업규모가 작은 소기업 · 소상공인의 공공 입찰참여 및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납품실적 인정기간	최근 3년 이내	최근 5년 이내



유자격자 명부 등급기준 재편성

-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제한경쟁 입찰에 적용되는“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의 등급기준을 재편성하여 배정공사가 조정됩니다.

- 등급별 공사의 1등급 편성기준을 시평액 5,000억원으로, 1등급 배정공사도 1,500억원으로 상향하여 편성합니다.

* 조달청 공고「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 초대형 건설업체만을 1등급으로 편성하여 2등급 이하 중견·중소건설 업체에 실질적인 수주기회가 확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구 분	편성기준 (시평액)	배정공사		편성기준 (시평액)	배정공사	
			토 목	건 축		토 목	건 축
등급 편성기준 및 배정공사	1등급	~1,700억원	1,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상	~5,000억원	1,500억원 이상	1,100억원 이상
	2등급	~700억원	1,300억원~ 700억원	600억원~ 500억원	~1,000억원	1,500억원~ 850억원	1,100억원~ 850억원
	3등급	~400억원	700억원~400억원	500억원~400억원	~500억원	850억원~500억원	850억원~500억원
	4등급	~270억원	400억원~270억원	400억원~270억원	~300억원	500억원~360억원	500억원~360억원
	5등급	~190억원	270억원~190억원	270억원~190억원	~180억원	360억원~200억원	360억원~200억원
	6등급	~130억원	190억원~130억원	190억원~130억원	~120억원	200억원~130억원	200억원~120억원
	7등급	~87억원	130억원~ 87억원	130억원~ 87억원	~87억원	130억원~87억원	120억원~87억원



공동이행방식에서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

- 공사이행보증서가 발급된 공사의 경우,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배제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 등

※ 대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중소기업체의 경우에 대기업의 부도 발생 시 연대책임에 의해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는 문제 해소 필요

- 대기업의 워크아웃 · 부도 발생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 중소기업에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피해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도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책임	연대책임	계약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경우,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 부담



협상계약 시 납품실적 등 세부 평가기준 신설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납품실적·경영상태 등의 평가 세부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적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 지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9조

- 협상계약의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체의 입찰부담이 감소되며, 과거 납품실적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중소기업, 신생·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집니다.

* 시행일 : 2013. 12. 1.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납품실적· 신용등급 평가기준	발주기관별로 상이하게 설정	평가기준표 공통 적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

- 지역의무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 공사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 과거 계열회사 간에 공동수급체 구성을 금지하였으나,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대부분 발주기관에서 계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체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계열회사 여부 확인을 명확히 하여 지역 ·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를 보장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도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지역의무 · 주계약자방식 공동수급체 구성방식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승인요건 명확화

- 공동계약 체결 이후 구성원의 지분율 변경 사유를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2조

- 단순 경영상태 악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관리를 철저히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도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공동계약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구성원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02

공공판로지원을 확대합니다.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
-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하한률 상향 조정
- * 공기업 등의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
- *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 확대
- * 지방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연장
- * 공사규모에 따른 구성원 수 및 지분율의 탄력 운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이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제2호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 한도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가능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 시행

- 공공기관 연간 총구매액의 일정부분(물품·용역 5%, 공사 3%)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강화합니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의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를 통해 격차해소와 여성기업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소관법령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	권고	의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의 낙찰하한를 상향 조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입찰 시에 적용하는 낙찰하한률이 85%에서 88%로 상향 조정됩니다.

*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 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제품 품질 향상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 (입찰가격/예정가격)	85%	88%



공기업 등의 공동상표 수의계약 한도 확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이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2.3억원에서 7.9억원으로 확대됩니다.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 공기업 등에서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 한도 확대로 공동상표 개발에 참여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가 확대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3. 11. 18.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공기업 ·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 (공기업 · 준정부기관)	2.3억원 미만	7.9억원 미만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 확대

- 공공 공사에서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도급 적용 대상이 종전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2조의3

- 중소기업이 공동도급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확대되고, 참여 중소기업은 주계약자와 대등한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보장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주계약자 방식의 공동계약 대상공사	500억원 이상	300억원 이상



지방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 연장

-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의 일몰기한이 '13. 12. 31일에서 '15. 12. 31일로 2년간 연장됩니다.

※ (대상사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공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1578호)」 부칙 제2조

- 혁신도시 이전사업이 지연된 해당 지역 업체도 이전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지역의 업체와 동등한 수주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적용 일몰기한	'13. 12. 31.	'15. 12. 31.



공사규모에 따른 구성원 수 및 지분율의 탄력 운영

- 공동계약방식에서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업체 수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공사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구성원 수와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9조

- 공동수급 구성에 있어서 사업 및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최소지분율 및 최대구성 업체 수	구 분		최소 지분율(%)	최대구성 업체수(개)
	분담이행방식		-	5
	공동 이행 방식	일 반	10	5
		일괄·대안 (1,000억 원 이상)	5	10
	주계약자관리방식		5	10
				발주기관이 구성원 수와 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03

창조경제와 함께 합니다.

- * 용역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방식 개선
- * 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 재개발 범위 명확화
- *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자의 작업 장소 선택권 확대
- * 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수익계약 허용
- *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
- *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기술력 평가 도입
-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시기 조정
- * 신성장산업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용역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소프트웨어 용역에서만 적용되던 계약목적물 지식재산권 공동소유가 모든 용역에까지 원칙적으로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

- 창작자(개발자)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어 개발자는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복제 · 배포 · 개작 등의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발주기관 소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공동소유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방식 개선

- 협상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의 가격입찰서 평가 시 입찰 평균가의 80% 이하는 동일한 점수로 평가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에 대해 동일한 평가점수를 추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덤핑입찰의 유인을 제거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보호·육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소프트웨어 사업의 입찰가격 평가	추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	추정가격의 80% 미만은 80%로 평가



소프트웨어 용역의 유지보수, 재개발 범위 명확화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유지보수와 재개발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무상 하자보수 이외에 유지보수와 재개발에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범위	①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 ②과업내용서에 반영되지 않은 기능개선, ③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①장애 및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②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 ③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④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소프트웨어 용역 사업자의 작업 장소 선택권 확대

- 소프트웨어 용역 수행 시 핵심 개발인력을 제외한 지원인력은 원칙적으로 개발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2조

- 용역인력이 발주기관 인근에 상주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SW업체의 추가 비용부담이 경감되고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SW용역의 작업 장소	발주기관이 인근에서 상주하도록 요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인력은 업체에서 근무 가능



상용화 기술개발로 제작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

-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시작하였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산업으로 선정·지원받은 개발기술로 제작된 제품을 당초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시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3호 다목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촉진되고 개발된 기술로 제작된 제품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수의계약 사유 추가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받은 기술로 생산된 제품을 당초 수요자가 구매시



신기술공사 적정가격 보장

-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아래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 \text{예정가격} \times \text{낙찰률} \times \text{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 + \text{기술사용료}$$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2

- 낙찰자와 신기술 보유자 간 하도급 대금 관련 분쟁을 방지하고, 적절한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기술개발이 촉진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신기술 하도급 대금 지급기준	예정가격×낙찰률×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예정가격 × 낙찰률 × 하도급대금 적정성 심사기준(82%)} + 기술사용료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기술력 평가 도입

- '14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분야의 시공실적 보유정도, 핵심 기술자의 경력, 시공평가 결과 등을 평가합니다.

*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기술력을 갖춘 업체는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낙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또한, 기술력 있는 업체가 시공을 맡게 됨으로써 공공 시설물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 시행일 : 2014년 시범사업부터 적용

☞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주요 평가요소	<p>〈최저가 낙찰제〉</p> <p>입찰가격</p>	<p>〈종합심사낙찰제〉</p> <p>입찰가격 점수 + 동일공사 시공실적, 동일공종그룹 매출 비중, 배치 기술자 시공경력 점수 등</p>

[참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유예

-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를 2014. 1. 1일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확대시행 시점을 2016. 1. 1일로 2년간 유예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2015년까지 현행처럼 적격심사낙찰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	2014. 1. 1.	2016. 1.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심의시기 조정

- 발주방식 중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 선택 여부를 심의할 때, 심의시기를 기본설계 이전에서 기본설계 완료 이후로 조정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9조

- 이를 통해 부실설계를 차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의 심의 시기	기본설계서 작성 전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



신성장산업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확대

- 로봇, 의료기기 등 신성장산업 제품 중 R마크(지능형 로봇 품질인증), GH마크(보건제품 품질인증)가 있는 제품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조달청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8조의4

- 신성장산업 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조달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R마크, GH마크	〈신설〉	중요기술로 평가된 신성장산업제품의 1차심사 면제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국가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 *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
-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금액 보장
- *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 확대
- *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사회적 책임 평가
- * 나라장터 사용의 민간개방 확대
- *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확대 및 산정근거 공개
- *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입찰서류 허위·부정 제출 시 계약 해제·해지
- * 공공조달 통계 작성범위 확대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운영

- 조달청은 원·하수급자가 하도급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을 지급하면 발주기관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운영합니다.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발주기관이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지연지급, 미지급 등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시정조치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2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하도급 계약 및 대금지급 등의 확인	수기 제출 및 수기 확인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처리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와 하도급 금액 보장

- '14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세부 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지를 평가합니다.

- 또한, 제출한 하도급계획을 시공과정에서 하도급 이행계획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차기 입찰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낙찰자 결정시 하도급 금액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차기 입찰에 그 이행여부를 반영함으로써 하도급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년 시범사업부터 적용

☞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하도급 관련 평가	〈신설〉	세부공종별 하도급 금액이 기초금액의 60% 이상, 입찰금액의 82% 이상인지 여부 등을 평가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 확대

-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평가 대상사업이 20억원 이상 정보화 사업으로 확대 됩니다.

* 조달청 지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9조

- 중소기업과의 공동도급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계약상 지위를 향상시키게 됩니다.

* 시행일 : 2013. 12. 1.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대상사업 (SW개발, 운영 및 유지·보수, 정보화전략수립)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공공 공사 낙찰자 결정시 사회적 책임 평가

- 300억원 이상 공사의 낙찰자 결정시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합니다.
- '14년도에 시범 운영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항목이 평가요소로 신설됩니다.

* 발주기관별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공공 공사에서 공정거래기업 등의 낙찰 가능성이 증대되고, 이는 다시 바람직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시행일 : 2014년 시범사업부터 적용

☞ 발주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예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사회적 책임 평가 요소	〈신설〉	건설인력 고용, 공정거래, 건설안전



나라장터 사용의 민간개방 확대

- 조달청은 '13년 10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시범 개방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간단체가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계약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사회적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월(비영리단체), 2015년(중소기업)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 민간개방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나라장터 개방대상	공공기관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 · 영어조합	비영리법인('14년) 중소기업('15년) 추가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공사 확대 및 산정근거 공개

- 일괄 · 대안입찰 공사 및 일부 고난이도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공사손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에도 적용됩니다.
 - 또한, 공사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55조, 제6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
-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계약이행 중에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산정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공사	일괄 · 대안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종 포함공사	기술제안입찰 추가
산정근거	〈신설〉	적용대상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일정금액 이상(국세 5억원 또는 지방세 5억원 등)의 조세포탈세액이 있는 자는 공공조달시장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년간 정부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시행일 : 2014. 2. 14.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입찰참가제한 사유	〈신설〉	일정금액 이상의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입찰서류 허위·부정 제출 시 계약해제·해지

- 입찰서류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4조제1항제7호,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제1항제6호,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9조제1항제7호

- 입찰과정의 부정행위를 차단하여 공정한 입찰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사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	〈신설〉	입찰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공조달 통계 작성범위 확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모든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조달통계를 작성합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 통합적인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7.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조달통계 작성대상	수요기관의 자체조달 통계 제외	공공기관 전체

05

손톱 및 가시를 뽑습니다.

- *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
- * 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
-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
- *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공사 확대
- *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 사유시 공동수급체 재심사
- *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합리화
-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정비
- * 표준품셈 및 법정기준가격 준수
- *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과도한 선금지급 개선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금액대로 선금을 지급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일부 발주처의 선금금 과다지급 관행이 개선되며,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선금금 과다지급 개선	〈신설〉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 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금액대로 선금 지급



선금 반환청구 사유 조정

- 선금지급업무의 효율성 및 선금반환 조치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선금반환 청구 사유가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

- 합리적인 선금반환 청구 사유조정으로 선금지급업무 효율성 및 업체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선금반환 청구사유조정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삭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시기 조정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대상이 되는 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이 준공대가 지급 이후 발급될 경우에는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게 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실경비에 대하여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공사업체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청구 시점	준공대가 신청 시까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 가능



설계변경 시 단가적용 대상공사 확대

- 설계변경 시에 설계변경 당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공사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로 확대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및 부칙

- 공사를 수행 중인 중소기업체의 설계변경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고, 적정 공사비를 받게 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설계변경 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공사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



일부 구성원의 부도 등 사유 시 공동수급체 재심사

-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등 사유 발생 시에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조정하여 해당 공동수급체의 적격여부 또는 입찰참가자격여부를 재심사합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9조의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10조 제2항

- 잔존구성원만으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재심사함으로써 계약의 이행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적격심사기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적격심사기준	〈신설〉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	일부 구성원이 낙찰자 결정전에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심사



계속비 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 기산점 합리화

- 계속비 공사에서 완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기산점을 해당 부분의 완공시점부터 기산하여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 계속비 공사에 있어 시공업체의 하자책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계속비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신설〉	완공된 부분에 한해 해당 부분 완공 시점부터 기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정비

- 단가계약에서 계약을 일부 미이행 할 경우에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 보증금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제외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 부분을 합리적인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비용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규정 개정	〈신설〉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양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귀속 대상에서 제외



표준품셈 및 법정기준가격 준수

- 계약담당공무원은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또한, 일정률로 계상하는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에 대하여는 사전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조, 제5조

- 적정공사비 확보로 계약상대자의 공공수주 수익이 개선됩니다.

* 시행일 : 2014. 1. 10.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예규 · 유권해석 > 국가계약 법령예규 > 계약예규 전문('14. 1. 10. 일부개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계약담당공무원 주의사항	〈신설〉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준수
비목별 가격결정 (정률계상 비목)	〈신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등은사전공고한 공사원가 제비율 준수



우수조달물품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 조달청 고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 사업자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기업에서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부담과 번거로움이 사라집니다.

* 시행일 : 2014. 1. 1.

☞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종 전	개 선
사업자등록증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 제출	제출 생략 가능

2014년도 국가계약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일 _ 2014년 1월

발행처 _ 기획재정부

디자인 _ (주)삼일기획(TEL 044 · 866 · 3011)

·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중소기업청